

<국방부의 통일뉴스 만평 언론중재 신청 관련 논평>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1.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시키고 ...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왜곡했다는 그림만평의 내용들은 이미 정치인, 전문가, 방송보도에서 수차례 제기되고 다뤄진 내용에 근거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만평 내용 중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당국이나 미국 MD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자파 영향 문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회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더구나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명징한 논리전개가 필요한 '기사'가 아니라 의인화된 사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들이 말풍선으로 대화하는 '그림만평'이다.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만평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한 이번 국방부의 졸렬한 행태는 만평작가들의 상상력까지 검열통제해야 할 정도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현실의 반증이라 할 만하다.

4. 우리는 이번 국방부의 정정보도 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사건이나 사드 관련 KBS 보도지침 사건에 이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방부가 정정보도 신청에서 "해당 내용이 모바일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관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2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